

교육경력 폐지·정당 공천 최대 이슈로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어떻게 되나

정당경력 “현행 유지” “폐지” 쟁점 27~28일 국회 교과위 처리 주목

2월 임시국회를 코앞에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감과 전국적으로 77명에 이르는 교육위원에 대해 주민 직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위원 선거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치르고 ▲교육경력에 완전히 폐지하며 ▲정당경력은 교육감 6개월, 교육위원은 완전 폐지하는 등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애초 이 법안은 새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며 전교조 등 교육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문제제기에 나서 27~28일 사이에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임위에 법안 처리를 맡겨두다시피 하다가 이번에는 의원총회(27일)를 열어 당론을 확정기로 했다.

◇교육위원을 비례대표로=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전체 교육위원 과반수는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돼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 경우 수도권은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시·도의원보다 권한이 적은 교육위원 한 명을 뽑게 돼 표의 등가성에 맞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교육위원의 정당공천을 대안으로 내놔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139명 중에 교육위원 77명을 제외한 62명이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소위 개정안은 그나마 남아 있는 77명까지 모두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으로 넘기라는 주장에 다름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고, 정당추천을 받지 않는 무소속 교육위원의 출마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위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경력 제한=법안소위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등 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법에선 교육감 5년, 교육위원 10년 등으로 교육



지방선거 설명회 ‘후끈’
법 주요 내용 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 예정자, 정당 간부 등을 대상으로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설명회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력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위 이해국 한나라당 간사는 “교육경력에 제한을 두면 교장, 교육장 등 교사 출신들이 출마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교육공급자 입장만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직신제를 하게 되면 국민 일반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니 후보자격 제한을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진 의원은 비전문가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육경력에 되살리되 제한을 2년 정도로 완화하는 정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당 경력=현행 법안은 최근 2년

동안 정당 경력이 없을 경우에만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교육감은 6개월로 제한을 완화하고 교육위원은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하지만, 김영진 의원은 “이 경우 정치권에 출세가 심화돼 교육자치가 훼손된다”며 정당경력 제한은 현행(2년)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박준영-이석형 세종시 대승 설전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세종시 수정안 대응 강도를 놓고 박준영 전남지사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군수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준영 지사는 전국 대다수 광역단체장과 달리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 “혁신도시건설 등 국토균형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국가적 이슈에 대해 도정 책임자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 측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을 바꾼다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었고, TV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이 전 군수의 공격에 반발했다.

강운태의원 내일 출판기념회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28일 오후 2시 광주영주체육공원 내 빛고을체육관에서 ‘미완의 광주, 창조적 중심도시로’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강 의원은 이 책에 임명직 마지막 광주시장 당시 이야기와 국립 5·18 묘지 성역화 사업 과정, 김치축제·광주비엔날레 개최까지의 사연 등을 담았다.

기초장 등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철)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제1차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처는 광주시장 사무처(062-384-9430)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2월19일부터 시 또는 구 선관위에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윤기선씨 지역사랑 교육공동체 구축

전남도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윤기선 사단법인 남도사랑나무 이사장은 26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교육혁신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치·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면서 호남의 교육이 고립의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랑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지역의 인재를 지역 안에서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참여당 호남 세 확장 시동에 민주 경계심

지도부 동교동 방문… 30일 5·18묘역 참배

국민참여당이 창당과 함께 6월 지방선거에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초반 세 확장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호남 공략에 본격 나설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의 기반인 호남 민심의 향배는 지방선거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26일 이재정 대표와 이백만 최고위원 등 국민참여당 지도부는 동교동 사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국민참여당 지도부가 창당 다음날

인 지난 18일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한데 이어 이날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것은 민주진영의 ‘적통’임을 부각시키면서 DJ로 상징되는 호남 민심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참여당은 오는 30일에는 전남도당 창당대회에 맞춰 광주 5·18 묘역도 참배한다.

국민참여당 핵심 인사는 “호남의 경우 민주당에 대한 괴로움과 실망감이 겹쳐져서 국민참여당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만 잘 공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한 호남 공략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병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선 수도권 지역 후보들을 선정한 이후 호남 지역 후보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호남에서 국민참여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호남에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은 민주당에서 뛰고 있어 국민참여당의 인물난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의 약진은 수도권 등에서 야권 표심 분열로 민주당의 고전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

지방선거 개각설 ‘술술’

MB, 설 이후 차관급·靑 비서관 인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설 연휴 이후 정부 부처 차관 및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설 연휴 이후 차관급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청와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용됐거나 임명된 지 2년이 가까워오는 부처 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대부분을 일단 인사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차관급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다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차관급 공무원들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3월4일(선거일 90일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황준기 여성부 차관,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은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2월 소폭 개각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달근 행자부 장관이 경남지사 선거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충남지사 선거에 나선다면 개각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이만희 환경부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설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부담감 등 때문에 개각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급 공무원 2월 1일 시작반

9급 공무원 2월 1일 시작반

사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임용고시복합교육행정직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9급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역의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